尹, 19~24일 4박6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20일 파리 BIE 총회 · PT 참석…韓佛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9~24일 프랑스와 베트남순방에 나선다.

프랑스에서는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 맞춰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이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회담을 갖는다.

베트남 방문은 국빈방문으로,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국빈 일정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등 양국 정부와 기업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발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부부는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며 "프랑스 방문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172차 BIE 총회참석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회 1일 차인 20일에는 2030 등록박람회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참석하고 2일차인 21일에는 우리가 주최하는 2030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맞춰 20일에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2개월 내 G7(주요7개국)과 EU(유럽연합) 정상 모두와의 만남이 일단락짓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23일에는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공식 환영식,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공식 국빈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응우옌 푸 쫑 당 서기장, 팜 밍 찡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의 최고지도부 전원과개별적 면담 갖는다.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野 법안, 이자 면제 초점 맞춘 포퓰리즘 정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 이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야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을 '이자 면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이자 비용에만 세금 860억원 규모가 투입되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이다.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원)의 중간치로 정했는데,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남도학숙 '공익소송 철회 배제'는 2차 가해"

오랜 소송 끝에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은 남도학숙 직원에 대해 소송비용 청구 논란이 일자 광주시와 남도학숙이 소송사무규칙을 개정했으나, 정작 남도학숙 사건은 배제하는 부칙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 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 제17조로,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심의회 심의 · 의결과 시장 승인을 받아 소송비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부칙에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소급 금지 조항을 단서로 붙여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 회수 포기조항을 마련한 지자체 중 이 같은 내용의 부칙을 단서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송비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를 받아내려는 시와 남도학숙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김도기 기자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징계 회부 3년만

'자녀 입시비리' 1심 유죄에 결론

2020년 1월 검찰 기소에 직위해제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결정했다.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된 지 3년 만에 징계를 내린 것이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 김정곤 · 장용범)는 지난 2월3일 1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전임 오세정 총장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 · 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있다.

아울러 징계위에서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 · 해임 · 정직 등 중징계, 감봉 ·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결과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 뒤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재개하자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미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시스

'천과 같은 혀' 작품 설명 듣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를 관람하며 설명듣고 있다. /뉴시스

"초동 조치 미흡" 광주 도시철도 상수관로 파손 질타

광주시의회 산건위 · 환복위 간담회, 원인 · 대처 방안 촉구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위기대응 전문가 양성 등 시스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도시철도2호선 건설 중 상수관로 파손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개최하고, 광주시 상수관로 파손사고 전반을 점검한 뒤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지난 6월 1일 서구 금호동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제2, 제3의 유사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의회는 사고 당시 오후 5시께 상수도관에서 소량의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단수 우려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우선 지적했다.

이어 오후 7시10분께 결국 상황이 악화돼 누수가 확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집행부의 사고관리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도시철도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는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6월1일 사고는 그 발생 원인이 드물긴 하나 이에 대한 초동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은 "공사 중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사고가 빈번히 예상되는 만큼 위기대응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상수관 파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매장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도면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공사 전 지하 매설물 정보와 도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1~2m까지 직접 땅을 파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도면 오차 등으로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소령 계급 정년 45세→50세 31년만에 연장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하게 됐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령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방침이다.

갑질 폭로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사과 표명…사직 고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과 갑질을 주장했전 김유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13일 사과를 표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쨌든 다 떠나서 부족한 저의 일로 당에 걱정과 근심을 끼쳐 죄송하다. 이유가 어쨌든 한 번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사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신 위원장의 도당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후 신 위원장이 김 처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중앙당에 당무감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당무감사를 통해 김 처장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김 처장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김 처장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사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번 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당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호 매 만 평

이태헌

"한동훈, 민주당 범죄 집단화…오히려 통합 계기 될 수도"

'돈봉투' 윤관석 ·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전혀 예상을 못 했다"면서도 "검찰의 야당 탄압이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적 요소를 막아주는 방어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정치 행태가 오히려 민주당을 분열보다는 통합시키는 계기의 방어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상당한 갈등과 분열 양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심력도 작용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한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 '우리가 분열하는 순간 다 죽는다, 끝난다'라는 공감대는 다 있다. 분당되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비명 의원들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돈 봉투' 의혹에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계산된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이었다"라며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표인 한 장관이 국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을) 다 범죄 집단화해서 발언하는 모습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검찰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면서 29명을 특정했다는 건데, 의원들 입장에서 (부결표를 던지는데)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